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 서울특별시(서울시) × 서울NPO지원센터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2~5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

시민
시민행동

마을
마을공동체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시민 × (사)마을 공동기획 포럼 소개

□ 포럼 기획 의도

이번 포럼의 기획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NPO)가 서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운동과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은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걸어온 길이나 함께 하는 구성원의 특성 같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안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긴장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민사회 성장의 큰 축을 ‘시민성(시민력)의 성장’과 ‘사회문제의 해결(사회변화)’이라고 보았을 때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운동과 사회문제 해결에서 출발한 전통적인 시민사회 운동은 각자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두 가지 운동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이번 포럼을 통해 그 첫 걸음을 떼어보려고 합니다.

□ 포럼 구성

이번 포럼은 세 분의 발제자께서 화두를 던져주실 예정입니다. 주 발제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조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울시의 시민사회정책이 시민조직화에 유효한 지원인지, 칸막이 행정이 시민사회활성화에 어떤 제약을 주고 있는지, 지역(마을)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드는 것은 왜 어려운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 예정입니다.

주 발제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각각 마을공동체와 NPO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민조직 양성과 지역기반 시민단체의 초기 지원은 함께 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 조직의 통합이나 협력적 활동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두 센터장님께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실행계획, 아이디어, 제언들을 제안해보는 방식으로 발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발제에 이어지는 토론으로 시민사회운동과 마을공동체 운동이 만난 사례, 생활운동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의 지역화,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의 전제 조건 등 발제에서 제기된 여러 논의 지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식전진행	서울시NPO지원센터 실무자
	인사말	박태영 / 사단법인 마을 사무처장
14:05~14:15	격려사	오관영 /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14:15~14:20	토론진행	박영선 /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4:20~14:45	발제1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서울마을법인협의회장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4:45~15:00	발제2	전민주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연결-협력으로 가는 중
15:00~15:15	발제3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협력의 과제
15:15~15:30	휴식 시간	
15:30~15:45	토론1	조경만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총괄지원관
15:45~16:00	토론2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16:00~16:15	토론3	구명숙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상임이사
16:15~16:30	토론4	박선영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6:30~16:45	토론5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16:45~17:30	질의응답 / 플로어 토론	

목 차

- 발제1.**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서울마을법인협의회장
- 발제2.**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연결-협력으로 가는 중 13
전민주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발제3.**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협력의 과제 21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장
- 토론1.** ‘강한 시민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29
조경만 //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총괄지원관
- 토론2.** 마을공동체와 NPO는 왜 협력해야 하는가? 33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토론3.**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새로운 진전을 고민하며 37
구명숙 //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 토론4.**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세가지 발제문을 읽고 43
박선영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토론5.**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47
김소영 //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발제 1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서울마을법인협의회

1. 2019년 지역에서 시민단체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시민사회에 큰 충격과 전환의 계기들을 돌아보면 2008년 광우병 촛불과 2014년의 세월호, 2016년의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와 촛불이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회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많은 성찰을 안겨주었다. 박정희 체제에서 굳어진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은 IMF이후 신자유주의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여전히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매일 밤 성장률과 수출 증가에 목숨을 걸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성장주의와 석유화학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더 이상 지금의 사회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고 그 패러다임은 이미 끝이라고 사회는 여러 차례 격렬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촛불은 없다. 지난하고 끈질긴 논쟁과 개혁, 정치적 시민들의 계속되는 삶 이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지역의 시민운동은 변화를 맞았다. 큰 흐름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강하고 단단하게 아래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행정과 시민사회가 얼마나 실현해내었는지는 평가할 문제지만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시장에게 걸었던 한국사회의 기대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다. 마을공동체정책을 비롯하여 원전1기 줄이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주민자치회, 혁신교육지구, 협치와 지역사회혁신계획 등의 사업들

이 기획되어 자치구에 확산되었다. 만약 이런 노력들이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 천만 도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태생부터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대의 혁명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마을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온갖 법과 제도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능력의 한계로 왜곡되거나 굴절되어 서로 상처주고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혁은 정말 어렵다. 지난 20-30여 년 간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은 ‘박원순 시장’이라는 기회구조를 놓치지 않고 사회변혁을 모색하려고 정책에 깊이 개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것이 지역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닌 지대추구처럼 평가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이다. 공동체를 강화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하려는 기획은 이익추구와 다르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졌던 직능단체에 맡겨야 했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놓쳤을까? 결과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서울의 시민사회는 얼마나 더 성장하고 강해졌는가. 우리가 꿈꾸었던 사회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반대를 하면 100명이 모이고 대안을 말하자면 10명이 모인다.

대안을 실천하자고 하면 1명이 남는다¹⁾

2012년 서울시민연대와 풀시넷에서 조사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현황을 보면 약 120여개의 단체들이 서울과 자치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이 꼭 시민단체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직된 시민들과 결사체는 시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이다. 90년대 이후 공동육아나 공부방, 대안학교, 작은 도서관, 자활, 생협 등이 생활 속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 활동을 펼쳤고 한편에서는 서울시의 토건사업을 비판하면서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감시와 정책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다.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많게는 11개의 시민단체가 있었던 관악구부터 1개도 없었던 서초구와 2개 미만인 중구, 용산, 강남, 송파를 비롯해 자치구별로 평균 5개 정도의 풀뿌리단체가 있었다. 아마도 2012년 풀뿌리단체를 조사하면서 지역 간의 네트워크와 서울시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동시에 기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의 생태지도. 서울시민연대/서울 풀시넷)

1) 이현재 이원재 대담, 2019,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메디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8년이 지난 현재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은 얼마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는가. 둘째, 서울시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통해 서울시 정책에 개입하고 협력하는 단체들은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첫째 질문을 돌아보면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지난 8년간 새롭게 성장한 시민단체는 거의 없다. 다만 소규모로 주민들이 조직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등록은 1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고 사무실과 정관과 총회와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사단법인 설립보다 더 험난하다. 청소년 휴카페를 지원받기 위해 두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했지만 정기적인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 대다수이고 마을기업이 3개가 생겼으나 2곳이 지원 후 활동을 접거나 전환했고 청년네트워크와 마을미디어, 행복교육 등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지만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정부의 비영리조직지원법은 고유목적사업을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정기적인 회비를 내는 회원을 수천 명 확보하고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중앙시민단체나 국제개발단체에 한정된다. 2013년 조사에 의하면²⁾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대표적인 단체들조차 평균 200~300명 정도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다. 2019년 동행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비 1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 내외인데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월세를 내면 최저급여에도 못 미치는 활동가 1인 정도 있는 경우가 가장 나은 조직인 셈이다. 현재도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상근활동가를 둔 조직은 자치구에 한 두 곳 정도 아닐까 생각한다. 반상근 혹은 상근활동가 1인 정도의 규모라고해도 기본적인 활동은 다 필요하다. 회원관리와 회계, CMS관리, 공간 관리와 운영, 각종 회원모임과 교육, 웹자보 제작과 구성원간의 갈등관리, 지역네트워크 등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지역 단체의 상황이다. 그래서 풀뿌리 단체는 상근자 중심이 아니라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들의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 상근노동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대부분이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와 운영위원, 팀장과 팀원, 회원들이 지역에서 거의 상근자처럼 활동한다. 그래서 마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명확할 수 없다.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활동가는 사실 천하무적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가에게 중간지원조직의 일자리가 제안된다. 지역사회는 가장 안정적인 인력뱅크로서 지역 풀뿌리 단체를 바라본다. 그들이 프로젝트와 행정처리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관리에 유능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예전에는 성별분업으로 풀뿌리단체에 육아를 하는 시기의 전업주부가 주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업주부는 없다. 끊임없이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하고 개인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 장이정수, 2013, 풀뿌리단체의 여성참여활성화방안,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안정적이고 경험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단체를 만들 시간적 여유와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 회원 100명이 될 때까지 갈아 넣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단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 이제 5~6년 노력하여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5년 뒤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구인가. 조직적 목표는 잘하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혹은 협회나 사단법인에서 멈춘다. 그리고 최근 마을에 들어온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 따라 마을자치센터와 찾동의 마을사업전문가, 마을계획 촉진자, 도시재생활동가, 주민자치 지원관 등으로 이전을 권유받는다. 예전 같으면 5~6년 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1~2년 사이에 마을 활동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나 모범인에 남는 인력이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수많은 정책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민단체보다는 서울시의 행정위탁 사무 인력을 늘린 것이지 시민단체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지난 8년간 서울시 39조 예산을 감시하고 대안을 말하는 단체들은 늘었을까. 그렇지 않다. 최근 서울시 2020년 예산안 토론회의 토론자도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10여 년간 분야별로 나눠 분석과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발언자는 확대되거나 늘지 않았다. 그만큼 서울의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할 주체는 여전히 에너지가 누적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이 목적이고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지방행정 인재 양성기관이다. 그러나 전국의 3,756명의 지방의원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없다. 많은 이들이 지방의원들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욕하고, 제대로 의정활동 못한다고 비판해왔지만 정작 현실은 교육연수원도, 교육을 해 줄 경험있는 강사도 교수도 없다.”³⁾

서울시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협치과정에 참여하다보면 서울시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쉽지 않다. 같이 의논하고 돌아서서 비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서울시와 독립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할 정책 역량을 갖춘 단체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지난 8년간 협치의 이름으로 정책 감시의 역할은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 해묵은 세대논쟁을 촉발시켰던 이철승은 2000년대 중반이후 시민사회의 동원네트워크는 남았지만 정책네트워크는 급격하게 축소되었다고 말한다. 시민사회 단체의 지식과 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상층 두뇌들이 2007년(대선)부터 2014년(지방선거)에 이르는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중도 및 진보 성향의 정당, 심지어는 우파 정당으로 대거 흡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일어난 현상으로 시민사회를 이끌었던 386세대 리더들의 상당수는 직

3) 김용석, 2019, 지방의원의 길-6선 지방의원 김용석의 의정가이드, 시간의 서재

업정치인이나 전문 관료로 변신했다.⁴⁾ 이철승은 이것을 시민사회가 국가화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생활 속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지역풀뿌리운동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광역시 예산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과 역량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앙시민단체는 대부분 국가를 감시하려고 하지 서울에 활동을 집중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모니터링도 평가도 거의 없다. 박원순 시장이후 퇴화되었다기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서울지역사회는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새판을 짜야할지 고개를 드는 질문이다.

사단법인 시민이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진행한 6차에 걸친 토론의 방향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구온난화와 사회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9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남아있는 ‘시민단체’라는 정형화된 조직 형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인을 포함하여 ‘시민성’을 가진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정과 관계를 포함한 조직 ‘들’일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시민단체이기도 하고 더 포괄적인 다른 형태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포함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서울지역에 발생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보고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2. 서울과 마을을 연결하고 넘나들었던 사업들

1)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2012년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서울시에 마을종합지원센터가 생겼다. 초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규모가 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초기의 가장 큰 우려는 행정 주도의 마을만들기였다. 행정의 속도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였고 새마을운동식으로 관주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 방향을 잡아갔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행주체와 네트워크단위로 00구 마을넷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을넷대표자(연석)회의가 운영되었다. 햇수로 치면 8년째 운영되었다. 약 20여개 마을넷 대표들이 참여하여 월 1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 자신의 지역에 맞는 마을운동을 기획하고자 노력했다. 자치구의 상황은 인적 자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초창기 마을공동체사업의 모델이 된 마포구처럼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공동육아와 대안학교, 생협

4)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과 마을미디어 등을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 본 경험을 가졌거나 중앙정부의 자활 모델을 제공했던 관악구, 건물을 매입하여 자산화까지 나아간 광진구 등과 그런 운동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의 내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책은 모든 자치구에 일괄 적용되었다. 허덕이며 늘 따라가기 바쁜 자치구와 계속 다음 단계의 정책을 필요로 하는 자치구로 나뉘기 시작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모든 자치구에서 아직은 여물지 않은 마을공동체 역량을 모든 동네 확산해야 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인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확산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역에서 어떻게 시민주도로 참여할지 준비된 자치구는 내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시민조직이 없듯이 자치구 안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거의 없다. 자치구의회 모니터링하는 구도 거의 없다. 2018년 말에는 2015년부터 자치구 센터로 이관된 중간지원조직을 위탁받는 모법인들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고민하는 법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마을넷대표자회의와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정책의 성과는 운동의 공간으로 지역을 설정하여 행정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3년 동안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서마중)에서 직접 마을지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모사업 안내를 하도록 했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깨고 주민 3인이 모이면 지원을 한다거나 주민참여심사, 보조금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100만원 짜리 이웃만들기 사업,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학교, 대학연계, 문화예술창작소나 청소년 휴카페, 골목사업, 네트워크파티와 축제, 리빙랩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된 공동체에 관련한 모든 실험이 서울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고민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고민한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용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마을지원활동가의 처우문제라든가 여전히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행정서류, 융통성이 부족한 공모사업 방식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사회에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참여시킨 성과는 분명하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기회비용을 치르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4명의 센터 직원과 ‘건당’ 활동가인 마을지원활동가가 주민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네트워크와 주민참여제도와 회계까지 다양하게 컨설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면, 주민들과 함께 동네에서 관계망을 만들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대안을 찾고 실험한다면 지역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한 10년, 20년을 하면 말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산컨설팅에 머문다. 지역사회는 좀 더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고 없이 의회의 지적을 받지 않고 서류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인지 주민들을 더 많이 지

역사회와 연계하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지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가야 할 때다. 법인이나 단체는 지역 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주체와 세대가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작은 모임들이 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일부 자치구에서 논의되는 NPO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일지 마을공동체를 통해 이제 조직되기 시작한 주민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합의하에 마을지원센터의 협약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개선해야 한다.

2)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의제 중 서울시와 자치구를 동시에 조직하고 활동한 사례로 시정협치사업으로 진행된 젠더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회 감시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는 활동을 했는데 이후 여가부에 의해 여성친화도시만들기가 시행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주류화가 제도화되어 지자체의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는 단위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 각 지자체는 사업을 선정하여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격차를 분석 평가해서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사업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예산부터는 성인지예산이 적용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여세연과 함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8개 자치구가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우리 지역 성평등 리모델링 사업’ 으로 강동, 관악, 광진, 구로, 동대문, 동작, 서대문, 양천, 서초, 중랑 10개 구에서 여성모임과 단체가 참여하여 교육과 모니터링, 정책개선 간담회, 발표회까지 1년 동안의 사업과정을 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풀바람)이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 2017년부터는 시정협치와 참여예산으로 3년간 진행한 사업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의 서류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풀뿌리 여성주체를 조직하기 위해 시작되어 풀바람과 서울YWCA연합회가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이다.

5년 이상의 활동 속에서 가장 큰 성과는 성평등의제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각 자치구마다 조직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여성조직들이 오로지 성평등 활동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소규모 모임 수준인 경우도 많지만 25개 자치구에서 1년 동안의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과이다. 여성단체경험이 부재한 대다수의 지역여성들과 함께 성인지 관점을 갖고 여성정책 모니터링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정책 제안의 전문성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재단은 분야별 여성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젠

더관점을 갖고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현장의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대안으로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여성들은 상반기에 각 자치구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의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찾동, 일자리 등등의 서울시 사업도 모니터링하고 환류 및 개선제안 간담회 등을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사업이 대부분 정책의 하위 단위 사업이어서 거버넌스의 초점이 권한이 없는 말단 조직체계에 맞춰져 있다. 잦은 공무원의 이동과 권한 없음, 환류의 부재 등도 문제지만 모니터링하는 주체들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힘이 부치는 게 사실이다. 지역 여성들을 성인지적으로 교육하고 예산과 정책에 익숙해지기까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젠더 거버넌스로 인해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여성단체/조직/모임의 씨앗들이 생겨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성평등 활동을 견인하고 있다. 젠더 거버넌스는 두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해야 할 시기에 있다. 첫째는 형성된 지역의 조직들이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성평등 활동을 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 지역 여성단체가 서울에 손에 꼽을 정도였던 상황에서 각 자치구별 여성단체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랑, 마포, 은평 등에서는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전하였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성평등정책을 모니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과제이다. 이것이 풀바람의 조직과제가 될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작업이 될지 당분간 역량부족으로 유예될지는 현재로서는 논의중이다.

3) 시민협력플랫폼과 민민협력사업

시민협력플랫폼은 지역사회 시민주체 간 네트워크와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어 최소 3년간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주어져 지역 안에서 협치 역량의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의 절반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시민운동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제형성과 협력,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자치구당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줄어든 민민협력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어 진행되었고 중랑구는 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로 쏠린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주체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자치구는 다양한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 중앙시민단체보다 훨씬 주민참여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구가 지역에서 의제 중심의 활동공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을공동체 운동과 결합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제를 끈기 있게 실행할 주체가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마을활동가들이 곧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일부이다.

마을에는 8년 넘게 지역에서 미디어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활동비가 없어서 3일은 임금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 활동과 미디어 활동을 한다. 벌어들인 돈을 까먹으면서 끝끝내 임금노동을 유보하고 미디어 운동을 하는 활동가도 있다. 지역에 사는 세월호와 팔레스타인 독립영화를 찍은 부부 감독 역시 청소 일을 하면서 영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온갖 마을 행사에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 주인은 마을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화작업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일요일 밤 11시까지 혁신교육과 관련한 회의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무임금활동가였다.

2016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의제지원사업으로 교육, 건강, 청년 3개의 의제를 진행했는데 당시 교육의제를 진행했던 활동가는 단체를 만들어 지금은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건강네트워크는 지역 의사회와 사회복지와 네트워크하여 커뮤니티케어연구회를 발족하고 지역의 장애인과 봉제노동자와 청년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안한 의제들은 거버넌스, 여성, 청년, 문화,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환경,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장애, 건강, 다문화 등등이다. 올해도 그 의제들은 조금씩 논의를 진전하고 있다. 어떤 의제는 행정 끼면 소용도 없고 골치만 아프니 민간끼리 성과를 내자고 말한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다른 정책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을 구상하고 논의할 로드맵을 짜야 할 때다. 어쩌면 내가 사는 지역은 지금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아직 시작도 못한 지역 특화 복지, 노동과 마을의 결합, 중소기업과 상생,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연대, 지역사회 돌봄,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등 지역은 다른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4) 은평의 ‘마을시민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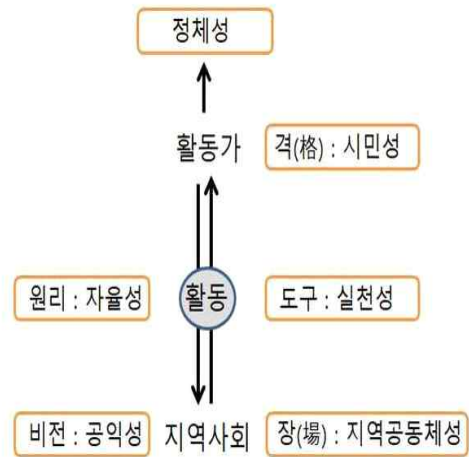
마을엔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이 생겼다. 마을지원활동가, 사회적경제코디네이터, 찾동의 마을사업전문가, 마을계획 촉진자, 도시재생활동가, 주민자치 지원관 등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외에도 다양한 활동가들이 생겼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은평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각기 따로 교육받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고 마을활동가인지 시민활동가인지 스스로도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다. 2018년 영역과 조직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마을시민활동가’라 이름짓고 이들의 기본적인 역량요소를 ‘시민성’, ‘자율성’, ‘실천성’, ‘공익성’, ‘지역공동체성’ 등 5가지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교육모델과 10개의 교과목을 현장활동가들의 토론을 통해 도출하면서 마을성과 시민성의 통합을 모색했다.

지역에는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확대되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평생학습, 도시재생, 협치 등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만들

기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공통의 지역사회 목표를 세우고 협력한다면 지역운동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지역에서는 각 분야의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은 존재하지만, 각 부분의 활동가들은 결국 지역사회 변화라는 공통의 기반위에서 비슷한 교육을 따로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공통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⁵⁾

만약 이렇게 자치구별로 교육을 같이 기획하고 활동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자치구의 운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할지, 정책과 운동을 연결하는 사고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기획이 서울이라는 것도 인지할 것이고 개선이나 변화가 요구될 때 조직된 목소리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들의 통합 역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은평 지역에 오랫동안 은지넷이라는 복지과 마을의 네트워크가 박원순 시장 이전에도 있었고 은평시민회라는 단체와 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는 환경단체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먼저 생긴 단체들은 텃세를 주장하며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주체들을 환대하며 논의의 장에 참여시키고 그들 모두를 포함한 마을을 구상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갈등은 생기고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이 있는 한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는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영역	역량요소	교과목	
활동가	[격(格)] 시민성 "시민의 시대, 조류(trend)와 양식(style)"	1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만들기	
		2 마을시민활동가의 삶, 문화	
		3 자율성의 원천으로서 자기비전	
핵심	[원리] 자율성 "자기의 이유로 걸어가기"	4 가능케 하기: 마을활동의 원리로서 자율성	
		[도구] 실천성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기"	5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기획과 실행
			6 마을활동의 A to Z, 관계
지역사회	[비전] 공익성 "하나를 위하여, 모두 두는 하나를 위해"	7 은평 지역사회 비전의 어제와 오늘	
		8 좋은 사회를 향한 공동의 탐색	
	[장(場)] 지역공동체성 "하나를 위하여, 모두 두는 하나를 위해"	9 은평학 개론	
		10 구조적 관점: 마을활동 생태계	



5) 사회협약

사회협약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대다수 서울시의 활동가들은 그 사실

5) <https://nposchool.tistory.com/310> [NPO스쿨]

조차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2019년 초부터 1년여를 진행하였다. 협약주체와 실효성 문제,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민간대표성, 협약 주체인 행정의 부재 등이 논란이 되어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서울시의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놓고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복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NPO 등이 일부지만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각기 다른 영역의 상황을 공유하였다. 협약이 지금 각 영역이 직면한 거버넌스의 한계를 어떻게 타개하고 질적으로 비약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협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논의의 장이 된 것은 사실이다.

지역에는 마을공동체, 복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NPO등이 각기 다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영역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는 만들기 쉽지 않다. 이러한 지역사회 단위들이 공통의 과제를 두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사업, 상호 소통에 나선다면 지역사회의 큰 파워그룹이 될 것이다. 서울사회협약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협약을 자치구와 함으로써 자치구별 역량과 단계에 따른 행정의 지원과 관계 설정에도 일정 기여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복지관 역시 동(洞) 담당체제로 가고 있고 자원봉사도 민간위탁 논의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 안에서 서로 어떻게 소통할지 장기적인 교류와 접점이 필요하다.

3.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마을과 NPO의 협력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 지역에서 시민단체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단체 조직화를 통해서만 가능할까? 이제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무기로 국가와 싸우고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형성했던 시민단체 중심의 운동만을 시민사회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지역의 기반으로 한 서울의 많은 단체들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자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정책 공동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과 지역사회에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운동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퇴근 후 전화기를 끊고 기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는 지방의 예산감시활동가처럼, 1인 연구소를 차려 지역의 정책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후’ 처럼 누군가는 어딘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

90년대부터 여성단체들이 상담소 등을 계기로 법인을 만들어 위탁사업을 받으면서 운동성은 상실했다는 자성을 오랫동안 들은 적 있다. 법인 설립 논쟁도 몇 년간 했다. 여성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여성학은 대학에 머물고 현장운동과의 결합이 떨어진 다며 강단페미니즘 얘기도 들었다. 여성운동은 그 위기 가운데 미투 운동과 새로운 세대의 참여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새로운 세대가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서울의 시민사회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지금 새로운 세대와 주체가 마을에

홀려넘치고 있는가. 그 준비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박원순의 기획비용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까지 탄탄한 시민사회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간절히.

첫째. 자치구 내의 대안적인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지역 전체의 활동가들의 모임과 장기적인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공동의 활동가를 교육하고 목표를 세우는 학습과 공론장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 마을에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도 필요하고 무급의 운동가도 있으며 상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민협력과 협치 등 지역의 각 사업별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느슨하게 연결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계속 서울시 활동을 하는 단위를 의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평가,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개의 조직들이 역할을 나누고 우산조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협약 등에는 지역사회가 서울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넣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작은 조직에 대한 의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막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시민들이 스스로와 운동을 조직하기도 전에 현실과 행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시민참여 지원 방안을 많이 마련했으면 한다. 크게는 인건비 지원과 공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재단은 풀뿌리 리더에게 인건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 대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보고서를 받는다. 아름다운 재단은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단체 설립을 하는 3년간 2억을 지원하고, 오픈소사이더터 재단은 단체의 목적이 분명하면 사용처는 묻지 않는다. 코어펀드라고 국제적인 재단은 점차 비영리조직의 영향력을 묻지 행정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민간재단이기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혁신은 그럴 때 필요한 것 아닐까. 대안을 찾아보자. 마을예산은 전체 예산의 0.1%나 될까. 건물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혁신을 말하기 무색하다. 해마다 조가 넘는 서울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될 텐데 일부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역별로 작은 공간을 매입하여 10년 정도 장기 대여 혹은 무상 사용 등의 지원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 수천억짜리 건물보다 지역에 흩어진 작은 건물들이 더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도 앵커건물을 나눠서 짓는 실험을 하고 있지 않나.

올해 강한시민사회 포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시민수당’이나 ‘시민활동가수당’은 성찰적 개인이 지역사회에 늘어나야 시민사회도 여유를 갖게 될 것 같다. 시장노동에 쏟는 시간을 철회하고 ‘돌봄과 여가’ 등의 비시장노동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시대의 새로운 노동윤리를 되새기고 싶다. 지금의 서울의 시민사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발제 2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연결-협력으로 가는 중

전민주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마을공동체, 다른 듯 닮은 꼴

(사)마을, (사)시민은 서울시정책의 파트너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다. 이 두 단체가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며 서울시정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두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지향의 말들이 있다. 바로 “시민사회 활성화”, “새로운 시민사회 조성” 이다.

공통되게 사용되는 ‘시민사회’ 라는 개념의 등장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시민사회’ 라는 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이뤄내고 질차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등장했다.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 1990년대에 시민의 집합적모임인 ‘시민사회단체’ 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작동될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자율적인 시민으로 살아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사회엔 적었고, 그 사이 전업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시민사회의 대표주자로 국가의제의 민주화와 개혁을 추진했다. 그 이후 200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 없는 시민사회” 에 대한 성찰과 함께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습은 계속 변모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풀뿌리는? 풀뿌리(grassroots)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대중” 또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일상에서 이루려는 다수대중,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평범한 나와 우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개념 안에는 시대 저항정신 즉,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지향이 담겨 있다.

마을공동체는 풀뿌리의 다른 이름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도모하는 주민모임의 현대어로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말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메트로폴리탄 서울, 마을공동체형성을 사회정책으로 부상된 까닭과 변화들

풀뿌리운동, 마을공동체가 주목을 받는 기점은 국가부도 IMF관리체제 직후인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다. 국가도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위기체제에서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조직들이 자발적인 봉사와 구호활동 등으로 삶의 기반을 지켜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효선이미션이 사건’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 등 광장의 촛불시민이 이 진실에 가닿는 것을 경험했다.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되지 않는 광장 촛불시민의 힘은 새로운 사회변화의 물결이 되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곧 사회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정치기회구조와 만난다. 2012년 민선5기 보궐선거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를 내건 새로운 시장과 시정을 등장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지역삶터에서 묵묵히 변화를 실천해온 풀뿌리활동가들이 모여 3차례 집담회를 거쳐 현재의 마을공동체정책 초안을 만들었다. 이 집담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후일담에 의하면 풍성하고 알록달록한 의견의 경합 속에서 도출되었고, 그 지향은 “서울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그에 따라 5년주기로 수립/평가/피드백하는 “서울마을기본계획”에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62호, 2012.3.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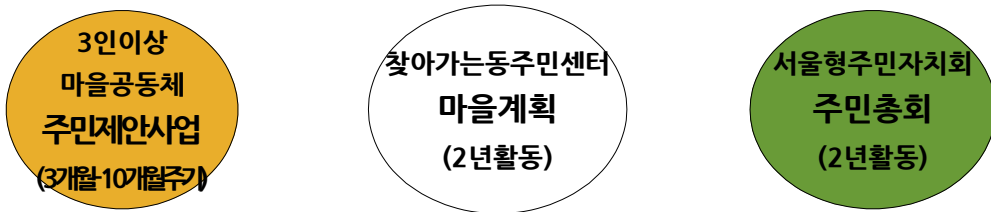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마을사람 키우기(사람)>, <마을살이 함께하기(삶)>, <마을지향 민관협력>을 지향하는 1기 마을기본계획(2012-2017)은 3인 이상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지침 개선, 주민의 숙의공론을 성숙시키는 마을계획 그리고 주민 주도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지원체계를 형성하기 위해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매년 2천 여 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선정되어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단기성 보조금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내 지역의 의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도모하는 마을계획,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치하는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배우고 채득하며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고 있다.



2012년-현재	2015년-2019년	2017년-2022년
주민모임 활성화	민관협력 지역계획수립	민관협력 지역자치
신뢰관계 형성과 활성화	풀뿌리 숙의공론 학습	종합적인 마을의제 발굴과 해결력
민초의 영역		민관 협치의 영역

<지역의제에 주민의 사회참여역량을 기르는 정책사업>



<내 삶이 있는 동네에서 생활문제를 해결을 지향하는 풀뿌리주민 조직형성>

① 2기 기본계획(18-22년) 정책지표



② 마을생태계조성지표(민관협력지표)

- 협력촉진: 참여유인기제, 면대면 대화 이해공유, 참여자의 헌신, 신뢰구축, 제도설계, 촉진적 리더십
- 사업의주요실적지표
만족도, 주도성, 거버넌스효과, 문제해결

③ 주민자치회성과지표 (가치/행동지표)

- 가치 : 주민참여/민주능력/독립성/주민권한확대/민관협력/관계자본확대
- 행동 : 주민자치회조직과 동단위민관협력 분과구성과 자치계획수립/주민총회과정/자치회관자율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견인하는 정책지표들>

• Vision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			
• 목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			
• 핵심가치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	분권·협치
• 전략과제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입상의 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축적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구축
•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2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주민자치회 설립지원 1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공동체 자원 확보·축적 촉진 6 공동체 전문가 양성·배치 7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마을자치 통합 지원체계 구축 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10 사회문제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마을2기 기본계획비전 : 2018-2022>

제도화 과정의 빛과 그림자는 빛으로 막는다!

서울의 마을공동체지원정책의 지향은 지역문제 해결력을 가진 주민조직을 발굴·지원(사회적 여건을 만들어)하여 새로운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지역주민이 풍요로운 사회적 역량⁶⁾을 갖춘다는 것으로 • 자유로운 개성을 가진 평등한 주권자 • 타자에 대한 존중, 공감 그리고 나와 연결감 • 다양한 공동체에 열린-포용-관용적인 마음과 태도 •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연대책임의식, 참여와 실천경험 축적해 내 삶터에 문제해결에 직접참여하고 행동하는 힘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기보다 30년 뒤즈음 활성화될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다. 시민의 사회참여라는 정책으로 학습과 배움, 실천과 성찰로 민주시민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 풀뿌리 주체조직의 힘을 북돋우는데 있다.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실행 된지 만으로 7년이 넘었다. 주민이 예전과 다르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고 있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민간중

6) 사회적 역량 : 주위 환경과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하여 자기와 타인에 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능숙하게 맺으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 능력, 주도성, 개방성, 사교성, 책임감 따위가 있다(출처: 다음 사전).

간지원조직이 생성되고, 예산사용의 결정권한을 시민모임이 갖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제도화의 그늘도 만만치 않다.

훈련된 활동가들이 중간지원조직원으로 차출되는가 하면, 민관 협치에 드는 감정적-시간적 비용으로 민간주체조직 고유의 목적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 맨 목소리가 속출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파트너십 주체로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했는데 갑을 계약관계로 전락하고 사회 변화와 혁신보다는 관료주의 언어와 관습을 익히고 습득하기에 빠져 민주시민으로써의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잃기도 한다. 그간 사람 몇 명, 사업 몇 건으로 사람의 성장과 실천력이 증진되고 문제는 얼마나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조급한 성과주의에 시달리고, 행정의 관행과 문화에 익숙해진 소수 인사만 의사결정체계에 호선되고 과잉 대표되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제도화의 질곡은 지난 여러 사회운동에서도 목격된 바 있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조심스레 그러한 제도화의 그늘이 서울의 지역공동체정책과 마을현장에 얼마나 드리워져 있는지 성찰하고 초심의 빛을 찾고 확산하기 위해 이상신호를 알아차리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늘을 그늘로 막을 수 없고 더 밝은 빛으로 다스려야 한다.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마주보면 좋겠네

마을공동체가 시민사회활성화의 주체로 호혜적으로 연결되는 관점과 협력방안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소한 일상의 재미와 의미로 성장 중인 마을공동체가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과 실천으로 확장해 가려면 시민사회단체의 지혜와 기다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기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① 사회변화의 시나리오 로컬에서 생활의제로부터 쓰기

-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생활의제로부터 시작. 즉 작은 것을 성취하며 거시적인 사회변화를 전망하는 관점과 안목으로 안내하기
- 시민의 사회·문화적인 관심과 건강한 욕망을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빛기
- 시민참여정책 모니터링하고 발전적으로 피드백하기

② 공익활동, 시민노동이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이룰 때까지 연대하며 숙의하기

- 시민참여로 공동 생산되는 사회정책과 서비스에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기 : 법과 제도, 관행 혁신을 위한 연대참여
- 비판-비평-비관적 입장에 경도되지 않고 갈등과 긴장을 조율하며 시민의 힘을 믿고 임파워먼트하기
- 시민노동에 대한 심리-문화-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조성을 위한 공론화하기
-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공익활동인재 함께 기르고, 순환하기

③ 지역사회 커뮤니티 앵커조직⁷⁾으로 발돋움하여 시민자산 만들기

- 커뮤니티 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은 근린재생조직으로 지역공동체 개발을 주도하고,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공영역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주민주체조직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미래의 모습이 이래보면 어떨까?

역할	내용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자 (service provider)	주민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직접제공하거나 다른서비스 접근지원
지역사회 재정관리자 (community financier)	지방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자본과 기회 유입과 지역시설 직접경영
지역사회 대변자 (community advocator)	공동체와 공공기관 사이 중재역할을 통해 공공서비스 변화의 촉매 역할 수행. 주민 스스로 지역의 쟁점과 서비스에 관여하고 목소리 내도록 지원
지역사회 기반지원자 (infrastructure supporter)	지역 내 다른 공동체조직들의 조직화, 공동체 사회적역량형성, 의사결정과 참여기술 향상지원
지역사회 역량강화자 (community empowerer)	주민이 지역사회의회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촉진하고, 적극적인 시민성과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

<커뮤니티 앵커조직의 역할들>

7) 커뮤니티 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은 근린재생조직으로 지역공동체 개발을 주도하고,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공영역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주민주체조직임. 주요 특성은 ① 장소기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함 ②다목적 기능수행 ③공동체 허브제공 ④지역리더십 향상 ⑤ 지역서비스계획 및 전달지원 ⑥ 지역공동체 자산의 소유 및 운영함. 대표적인 조직은 공동체개발 신탁, 공동체주택조합, 공동체평의회, 마을거점 사회적기업의 조직들이 대표적임. (지역공동체주도의 지역활력증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프리프, 김상민. 2017)

- 지역공동체 자산화⁸⁾ 공간모델 만들기

* 정부소유공간을 장기임대(10년이상)하여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사용토록 보장 : 관련 법, 조례의 개정이 필요.

* 지역시민사회가 운영하는 활력공간의 기능과 역할들

ㄱ) 마을생활SOC : 주민건강센터, 마을관리소, 마을요양원 등 생활서비스제공

ㄴ) 생활상담 : 마을변호사, 마을건축가, 마을세무사 생활상담 등 생활문제해결

ㄷ) 문화교류 : 마을극장, 마을카페 등 각종 주민활동 촉진 공간 운영

④ 사회적 가치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지표 공동개발 등

뭘 또 많이 하자고 제안해 버리고야 말았다.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고 꾸준히 변화할 것들을 함께 궁리하고 찾아보자.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8)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정의와 유형 : 마을공동체자산화포럼자료집 중 (2019.11)



발제 3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협력의 과제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

1. 주민과 시민, 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시민사회로의 지향은 어려운 것일까?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지지 등이 만연한 사회’ 이고, 시민의 결사체가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그 결사체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느냐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시민사회의 범주는 어디이고, 공익활동은 무엇이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이고, 청년은 청년일 뿐, 시민사회와 활동가라는 표현에 대한 어색함이 있다.

왜 마을공동체, 청년,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등의 영역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히지 않았을까?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① 행정과의 관계적 측면

- 마을공동체, 청년 영역은 정책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실제로 주민과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일상적인 체감도가 높음
- NPO를 대상으로 한 정책거버넌스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의 역할 수행으로 행정과는 협력과 긴장이 반복되고 있음

② 활동 기반의 측면

- 구와 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민
- 서울시 소재 NPO의 60%는 전국/세계를 기반으로 활동, 서울시/구/동 기반의 단체는 40%
- 공통적으로 광역인 서울시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있는 현실이 존재함.

③ 생활/관계기반 공동체 활동과 의제기반 활동의 차이

위의 세 가지 조건은 지금의 시민사회가 각자의 영역으로 분절화를 겪게 된 환경적 상황이다. 그리고 이 환경은 정책의 분절화가 먼저 추진된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전반을 들여다보며, 각각의 영역의 연결과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자의 성장이 서로의 성장에 밀거름이 되지 않겠냐는 ‘좋은 의도’ 였던 것도 사실인거 같다. 그럼 이 환경에서 각각의 영역이 (특히나 마을공동체와 단체가) 협력하고 융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서울시 비영리단체 활동환경 분석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433개 조사 결과>

구분	경향성
1. 활동대상지역	- 전국 단위 활동 48%, 글로벌 활동 14.1% (62.1%) - 서울시(광역) 27.7%, 권역/자치구/동 10.2% (39.9%)
2. 활동방식	- 애드보커시(11.3%), 상담·교육·인력양성(45%), 네트워크·협업(40.6%), 자원봉사·시민참여 (39.3%) 당사자 조직화(9.7%), 온라인기반(7.2%) ↳ 권역/자치구/동 기반 : 장애인(18.2%), 복지(13.6%), ↳ 서울시 기반 : 교육/문화/체육(23.37%),생태환경(8.3%)
3. 회원규모, 회비납부율	- 회원수 100명 이하(21.2%), 200명 이하(50.5%) - 회비납부율 평균 42.8%, 90년대 설립단체 회비납부율 높아
4. 상근활동가 규모 및 경력	- 1인 이하(19.2%), 2~5인(42.0%), 5인이하 (61.2%), - 신입활동가(1~3년)가 없는 단체가 60% - 중견활동가(3~7년)가 없는 단체가 50%

<p>5. 재정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만원 미만(30.5%), 2억원 이하 50%이상 - 회비(29.8%)와 후원금(22.7%) 등, 총 53.5% - 예산(15.9%), 민간지원(8.6%), 보조금 총 24.5% - 연간 10억 이상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자치구/동 기반(13.6%), 글로벌 (13.3%), 서울시(3.3%), 전국(6.7%) - 보조금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자치구/동 기반(31.6%), 서울시(16.0%), 전국(13.0%), 글로벌(14.3%)
<p>6. 지출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37.4%), 인건비(29.1%), 운영비(28.6%) - 경직성 경비 57.7%
<p>7. 사무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있다, 98.6% - 자가(11.3%), 월세임대(56.1%), 공유공간(15.7%) - 무상임대/기부공간사용(7.9%)

(출처)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연구, 현장연구자 모임 등과’

여전히 서울은 전국 단위의 의제를 다루는 단체가 많고, 이 단체들은 회비/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활동가 중심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마을활동은 구와 동단위의 생활권에서의 밀접한 관계력을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과 자립을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을 ‘조직화’한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최근 시민사회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개정은 시민사회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범주>		
법령·법안명	제정·발의년도	관련 조문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2018 (진선미)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2019 (권미혁)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준비중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법안	2016 (유민봉)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2017 (진선미)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주: ()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이름임.		

최근 제안된 정부의 법과 제도는 자치구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동까지 포괄하여 시민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 (2006), 협동조합기본법(2012), 마을공동체기본법안(2017),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안(2016) 등과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에는 자원봉사, 마을, 사회적경제/협동조합, NPO 등 공익활동/사회적가치와 연관된 모든 영역이 참여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민선7시 시정4개년 계획을 근거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도 시민사회는 ‘시민과 시민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앞서 정책의 분절화가 현재 시민사회분절화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민사회관련 법과 제도가 ‘포괄’적 방향을 견지하고 변화한다면, 현장 역시 서로간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서로 너무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2. 협력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

- 상황1 -- 영등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활동가가 ‘권역별NPO지원센터 조성률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논의 과정에 요청을 받아 참여했으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해보인다. 사무실의 소재지는 영등포이나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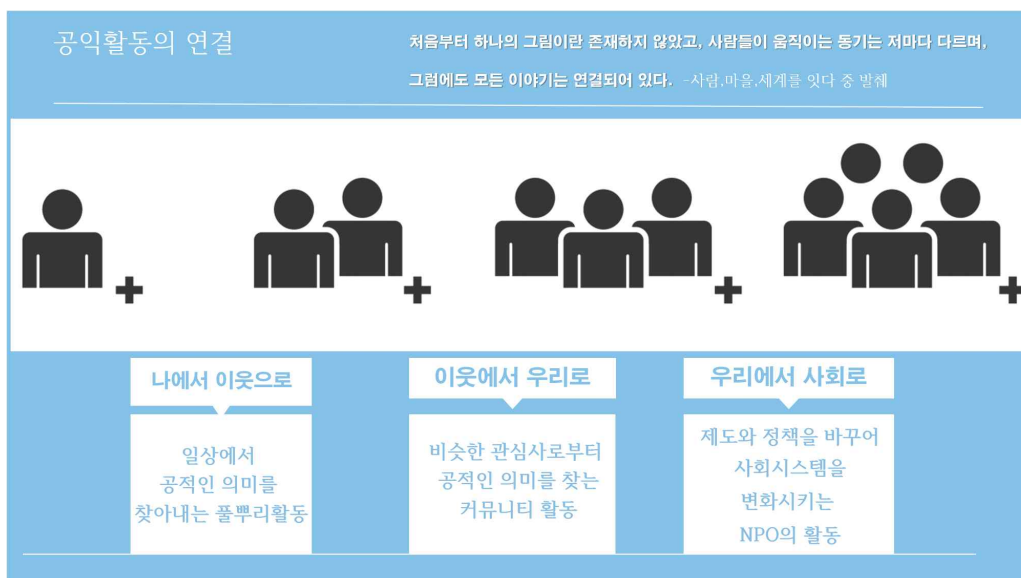
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은 영등포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의 현장이자 주체로서 주민에 대한 고민과 지역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 상황2 --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다. 자치구에 기반한 단체들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정책을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풀뿌리단체와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단체가 애초에 계획했던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에서도 단체 활동과 주민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이 다른데, 단체를 위한 지원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 상황3 -- 권역별NPO센터 기초조사에는 자치구에서 대표적인 활동가들이 연구자로 참여한다. 이 기초조사의 가장 큰 의미는 어느 권역이나 할 것 없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조사 과정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권역의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구 단위를 넘어서 이웃하고 있는 구와의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 그럴까? 기초조사에서 보니 서울의 모든 자치구는 그 나름의 지역사회 혹은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가 있고, 서로 다른 색깔의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행정의 지원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동, 구, 권역의 경계를 넘어 서울의 시민사회로 그 다양한 색깔의 활력이 모아지려면 조금 더 주민과 시민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상황4 --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저마다 다르다. 대다수 공익활동의 동기는 사회의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다.



(이것은 시민사회 성장의 과정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더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의 성공을 경험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은 그 시야를 넓혀 사회의 근본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1인 활동가들이 결국은 조직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이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에는 과하다 싶은 정도의 관리적 정책들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전의 1년 이상의 활동 기록과 100인 이상의 회원들이 있어야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등록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이 만만치 않다. 행정업무에 대한 기본 역량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근거도 비영리단체는 비껴간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 단체의 90%는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없다.

이런 상황은 주민활동을 통해 성장한 주민들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다.

3. 협력의 과제

협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에서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제정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는 조례나 계획을 만들어 수는 없다.

민선7기가 이전 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지원해 왔다는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합의제행정기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민/시민이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며, 작지만 중요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사회자본/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한 싱크탱크(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19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개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규범, 시민참여의 정도를 측정해 순위를 매기는 ‘사회자본’ 항목에서 한국은 전체 167개국중 142위란다. 전체 순위는 29위이다. 사회자본이 다른 번영의 항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사회자본’의 순위를 높이는 것은 국가차원의 시민사회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정부나 시장이 이 사회자본이 되기는 어렵다.

그 이전에 ‘현장’은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논의의 자리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안하기는 어렵다. 다만, 협력의 과제를 제안해보면,

- 의제에 대한 시-자치구간 균형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 환경, 인권, 노동, 성평등 정책의 시와 자치구간 연결자이자 주창자로서의 협력
- 풀뿌리 단체 활동기반 조성
 - 단체 활동 공간 협력 방안 모색
 - 마을공동체사업과 권역NPO센터 사업에 의제 중심의 사업배치
 - 미등록 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 구와 구간의 경계를 넘기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
 - 권역NPO센터 설립 전 공동의제 지원
 - 풀뿌리 단체의 일상적인 소통 강화 지원
- 주민의 단체 설립 지원 및 입주/협업 공간 공동 기획
- 권역/구 단위 지역사회/시민사회의 균형 성장
 - 구정과의 협치(정책수립, 시민사회지원) 역량 강화
 - 동일 권역내 구청장 협의회와 마을/NPO 네트워크와 연결
 - 권역내 공동의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정책, 공동공약 생산

이 협력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권역단위NPO지원센터와 구 단위 마을센터,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공동체과와 협치과의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다. 당연한 과제들이지만 협력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마을공동체지원과 NPO지원은 자발적인 시민의 동기를 지원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은 공동체란 다수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소수의 삶의 지지하고 지탱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공동체는 역동을 가진 공동체이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상태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지지 등이 만연한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혹은 동의한다면) 시민의 활동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아닌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가 지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시민의 참여를 바탕(주민활동)으로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제도를 바꾸는(NPO) 협력은 건강하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토론1

'강한 시민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조경만 | 서울시 협치총괄지원관

1. 암울한 스케치 : 정책 대상으로 파편화, 대상화된 시민사회

- 박원순 시장의 시민사회를 기반으로한 참여와 혁신 정책
 - 시민사회의 역량 및 성장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참여와 혁신정책
 -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으로 만든 행정의 정당성 확보 및 동원 전략
- 시민사회 정책은 사업화, 시민사회 역량 성장은 제자리
 - 정책의 선의와는 관계없이 시민사회를 행정의 하부 동원체계화하는 한계.
 - 시민사회의 성장 전략을 어디서부터 세워야 할지 단초도 발견됨

2. 누구의 '강한 시민사회'인가?

: 시민사회의 주체적 성장전략 vs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정책

- (서울지역)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장 전략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 서울의 시민사회는 누구이며, 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또 각각은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함께 무엇을 바꿀 것인지.

- 나아가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역량과 자원을 모으고 투자할 것이며, 덧붙여 정부(및 서울시)에 어떤 지원을 요구할 것인지.

○ 행정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역시 이러한 연결과 논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 정책영역별로 구획된 범위를 넘어서는 연결과 논의를 지원해야.
- 이러한 연결에 기반해서 정책영역별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3. 마을공동체와 NPO의 협력

○ 각 발제의 협력과제

(장이정수)

자치구 내의 대안적인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
서울시 활동을 하는 단위를 의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만들어가는 것
작은 조직에 대한 의도적인 지원 체계

(전민주)

사회변화의 시나리오 로컬에서 생활의제로부터 쓰기
공익활동, 시민노동이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이를 때까지 연대하며 숙의하기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앵커조직으로 발돋움하여 시민자산 만들기
사회적 가치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지표 공동개발 등

(정란아)

사회의제에 대한 시-자치구간 균형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풀뿌리 단체 활동기반 조성
구와 구간의 경계를 넘기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
주민의 단체 설립 지원 및 입주/협업 공간 공동기획
권역/구 단위 지역사회/시민사회의 균형 성장

- 중간지원조직 또는 서울시 정책단위간 협력? 시민사회 내부의 협력?
-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과제 :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과제
 - 자치구내의 대안적 운동 활성화 구조
 - 서울시 활동을 하는 단위를 의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만들어가는 것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 사회적 가치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지표 공동개발

Memo

토론2

마을공동체와 NPO는 왜 협력해야 하는가?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2017년, 우리 사회는 반칙과 특권을 비롯한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을 성취하였다. 하지만 힘겹게 지켜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광장의 성취가 제도 개혁과 나아가 국가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난 2년 6개월 여의 기간은 기존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었으며 그 기회가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민 사회가 공익과 상생을 위한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여, 대중들이 다시금 생활의 영역에서 기존 질서에 타협하게 되어 지금의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촛불 시민혁명은 다시금 역사 속에서 ‘미완’이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지난겨울의 건설적인 분노는 다음 단계로 비상하지 못할 것이다. “광장에서 일상으로”라는 구호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 기존 체제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을과 NPO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1. 마을공동체와 NPO는 왜 협력해야 하는가?

-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 하에서의 시민운동은 그렇지 않은 정권에 비해 제정, 의제에 대한 집중력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선과 악의 대립구도에서 오는 포괄적 집중성이 약화)
- 이것이 주는 위축효과는 단체들로 하여금 연대의 폭과 상상력을 심히 제한(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각자도생마저 버거운 상황)

- 이러한 상황과 달리 국가적 차원의 의제나 법과 제도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마을공동체와 직접적인 의제 대응단위인 NPO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상호교차성에 기반한 실천동력 강화 등등)

2. 마을공동체와 NPO의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 과제 존재

- 의제, 활동방식, 구성원, 관계기반성 등등 마을공동체운동과 시민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함
- 마을공동체와 NPO 사이의 이런 상이함이 의도치 않은 벽을 만들고 서로 간 교차를 어렵게 하는 현실 존재
- NPO 이전의 운동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활동가들은 특별한 내용적 연관이 없는 한 마을공동체 운동에 대한 접점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 운동의 연관이라고 하는 측면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한 필요성을 느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제(총선대응, 지방선거대응, 퇴진촉발 시기의 각종 토론회, 정치개혁 관련 의제 등등)에 부분적인 연대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마을공동체의 입장에서 NPO를, NPO의 입장에서 마을공동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3.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는 서로 협력할 수 없는가?

(협력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 활동의 대상과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와 NGO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시민단체 회원도 결국은 마을공동체의 구성단위이며 굳이 정체성을 분리할 이유 없음)
- 콜라보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의 성과와 이후 운동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치개혁서울행동 등등)
- 활동가들 간 활동의 상호침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토론회 등등의 계기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음

- 경계에 서서 경계를 허물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상호간 소통과 교류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연구)
- NPO와 마을공동체의 부자연스러운 연대를 시도하는 것 보다 서로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시도하며 접점을 넓히는 합리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Memo

토론3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새로운 진전을 고민하며

구명숙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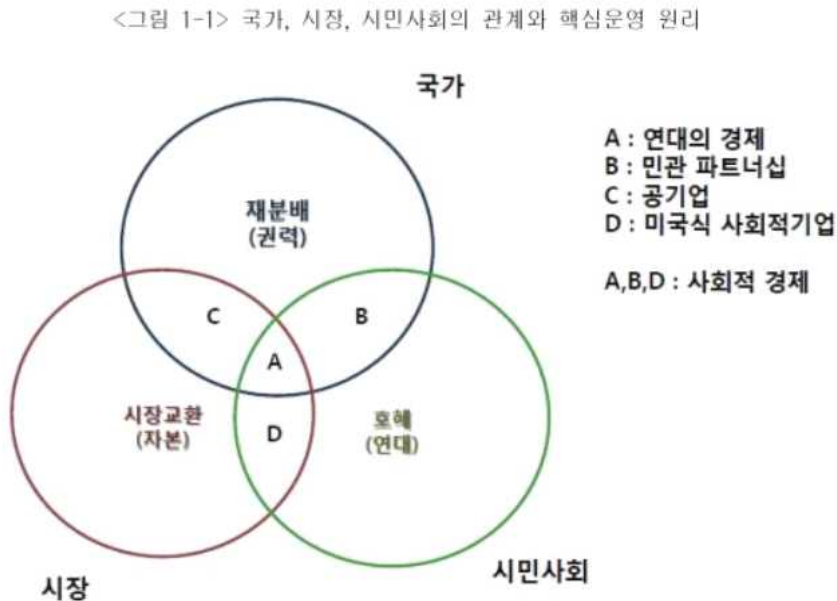
- 세 발제문을 통해 느낀 ‘강한 시민사회는 성숙한 시민의 역량으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힘이 있는 시민사회, ‘비판과 견제’와 ‘성찰’의 역량이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살아 있고 다양한 시민활동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지지 등이 만연한 사회’ 이고, 시민의 결사체가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그 결사체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느냐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정란아 센터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시민사회의 개념이해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사회⁹⁾(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2018. 12, 서울연구원, p5~6. 일부 인용 글)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이 재생산되는 국가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주되게 이루어지는 시장과 구분하여 공동체적 영역,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 영역을 지칭한다(김상준 2003; 노대명 2011). 시민사회 영역은 친밀성의 관계(가족), 다양한 결사체, 사회운동, 의사소통행위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9) ‘시민사회의 특징을 비정부적이고 비경제적인 관계들과 자발적 결사체’로 보며, ‘시민사회단체에는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모임, 단체, 기관 등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도 포괄하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각각 재분배(권력), 시장교환(자본), 호혜(연대)의 독자적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조직이 등장하여 각 영역 간 전통적 경계가 약화되고 시민사회와 정부, 시장 영역 간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노대명, 2011; 김인춘, 2014).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간 협력과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국가 간에,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시장 간의 중첩영역에서 주요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그림 1-1>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와 각각의 핵심운영원리



자료 출처: 장원봉,

http://www.d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680635

- 장이정수 대표님의 ‘지금 서울의 시민사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일반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로 이해하였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역의 시민단체는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경제적 자립에 주요 역량이 투입되는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가?

1. 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건강한 시민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의 열쇠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공론장에 생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의 최종 목표는 각자가 가진 필요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대에 있다. 인간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상을 위해 그들이 가진 공통의 필요를 엮는 것이 사회적경제’¹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마을이라는 공간과 마을 밖을 연결하며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시민단체가 시민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력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뿌리 또한 인간의 연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한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지자체) 또한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시민단체의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자신이 관여하는 영역에서 경쟁자나 비판자가 아니라 책 생산의 ‘파트너’ 또는 ‘당사자’가 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정책과 지역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와 연대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공론장’은 시민사회단체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자신감 있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자 지지기반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하고 성찰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는 ‘깊게 성찰하는 학습활동과 넓게 연대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 ‘역량 강화하고 학습하고 성찰하는 내부 조직’에서 이러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장’ 하는 활동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시민성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며 지역의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새로운 지지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이 등장한 시민들과의 연대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목

10) 참고도서 : 김기섭,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들녘

적이 불분명한 공모사업, 구색 맞추는 활동이 아니라 마을강사, 촉진자, 모더레이터(중재자나 조절자, 사회자)로서 활동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자치회 등과 함께 건강한 시민민주주의를 학습할 기회를 만드는 활동을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 무엇이 있을까요? 휘발성으로 소비되는 SNS나 1인 미디어를 넘어서는 공론형성이 가능한 ‘지역의 바른 언론 생산’에 대한 새로운 고민, 건강한 시민들의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실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방 재정 또는 지방계약법 등 각종 법률로 이루어지는 국가위탁사무에 관한 법 제도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 NPO 지원센터 정관아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활동가들의 사례에서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은 각자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단체가 애초에 계획했던 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인터뷰 내용에서 현장에 비워놓은 중요한 의자를 채워야 할 과제가 보입니다. 인력의 차출이 아니라 보충보완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성의 원리¹¹⁾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 현재는 국가 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위탁단체의 모법인은 용역에 의한 계약을 제외하고 사업수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① 활동가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활동을 보충할 다른 방법을 법인이 마련하여야 하거나, ② 활동가가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¹²⁾ ③ 위상이 모호한 중간지원조직의 직원(활동가) 급여체계 등 세 가지는 좀 다른 문제도 있지만, ①과 ③의 경우에 시민단체들의 운영 어려움 해소 방안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법률용어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이나 상위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보충의 원리(영문 principle of subsidiarity) 또는 보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행동에 대한 우선권에 수반해 그 책임 역시 당연히 하위계층인 소단위에 있겠지만 소단위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다음 단계로 책임을 져야 하는 차상위계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련 적용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결정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어울려 "견제와 균형"의 틀을 위해 주요한 원리임을 밝힌 바가 있다. (출처 : 위키백과)

12)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이 해결의 고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NPO 지원체계의 확장과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두 센터의 협력 또는 융합사업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시민사회의 연대의 길에 들어설 시간을 벌기에는 아직 시민단체가 ‘시간을 벌 자리를 만들 시간이 먼저 필요’ 합니다.
- 전민주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제도화의 그늘을 더 밝은 빛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제안해 주신 ‘③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앵커조직¹³⁾으로 발돋움하여 시민자산 만들기’가 최우선 과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역할 자로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 2018년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 5대 분야의 주요 과제 ‘ 중 하나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①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 목표, 역할 재정립 ② 현장의 요구와 조건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기능 업그레이드 ③ 중간지원조직의 물적 기반 마련과 정책통합 방안 마련
----------------	--

-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강한 시민사회의 재구축에 두 센터의 지원체계는 참으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튼튼한 밑돌을 만드는 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이는 말] 토론문을 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민사회를 잘 모르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의 제안임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 커뮤니티 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은 근린재생조직으로 지역공동체 개발을 주도하고,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공영역과 함께 동반관계를 형성하는 주민 주체조직임. 주요 특성은 ① 장소 기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함 ②다목적 기능수행 ③공동체 허브 제공 ④지역 지도력 향상 ⑤지역서비스계획 및 전달지원 ⑥ 지역공동체 자산의 소유 및 운영함. 대표적인 조직은 공동체개발신탁, 공동체주택조합, 공동체평의회, 마을거점 사회적기업의 조직들이 대표적임. (지역공동체주도의 지역활력증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프리프, 김상민. 2017)

Memo

토론4

“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세 가지 발제문을 읽고

박선영 |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이정수 선생님의 “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정란아 선생님의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협력의 과제”, 전민주 선생님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연결-협력으로 가는 중”을 읽고 자치구 현장의 고민과 광역의 고민이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등장했던 시민사회단체는 2019년 현재까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의미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의 외곽에서 비판과 감시자로서 사회변혁 운동을 했던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박원순 시장 등장 이후 사회혁신 정책사업들에 관여함으로써 행정과 민-관 협력을 통해 제도와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혁신교육,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시민사회단체가 사회혁신 사업에 정책제안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민-관 협치를 통해 사회변화를 이루려고 했던 모색은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제안된 정책을 실제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할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정책에 동의하며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 기대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을 묶어세운 마을넷의 활동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등장한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에 활동가들을 연결하거나 직접 뛰어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는 축소되었고, 단체의 기반인 사람을 잃거나 키워내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는 시민주도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더 잘 알고 있는 관이 주도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정란아 선생님의 발제문을 보면 법과 정책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범주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활동도 넓은 의미로는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마을공동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살이에 등장하였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망을 넓혀가며, 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지역의 의제로 받아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관계망을 확산해 주민을 조직화합니다.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운동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관계망이 넓어지고 주민 스스로 주민을 조직화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의제를 풀어나고 공론화하는 주체는 주민일 것이고, 이런 주민의 활동은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공익활동으로 연결됩니다. 기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또한 공익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주민들을 조직하고, 민관협력의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 혁신사업의 참여자,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기반 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좀더 넓은 범주로 주민을 포함한 주민, 법인, 단체일 것입니다.

그렇게 8년여 동안 숨가쁘게 활동해온 지금 이곳저곳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반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장이정수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민사회단체, 법인은 지역의 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했으면 합니다.
2.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각종 사회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 바빠 힘들어합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자원봉사, 도시재생, 협치, 마을계획, 주민자치 등. 민관협력 사업들인데 부서별 칸막이로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관 각 주체들이 만나 공통의 지역사회혁신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은 과감히 통합하며 협력해나간다면,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의미 있는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면 가능할까요?

4. 기존 시민사회가 해왔던 운동의 하나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민관협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필요인데, 이는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를 위한 강한 민민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5.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자산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분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체 설립 지원과 공간 지원을 통한 자산화 전략일 수도 있겠고, 10여년의 경험이 우리의 자산으로 쌓일 수 있는 기록과 연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강한 시민력을 위한 일상적인 연결의 모색들이 필요합니다.

6. 전민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일상의 재미와 의미로 성장 중인 마을공동체가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과 실천으로 확장해가려면 시민사회단체의 지혜와 기다림, 그리고 지원이 필요” 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일상에 쫓기다보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루하루 버텨내기 바쁜 일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얇은 문제의식만 남겼네요. 어쩌면 색다를 것 없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얇은 고민이 아닌, 나는 알지만 지역에서는 공유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 이 고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는 센터장으로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지역에서 토론하고 올라오지 못함) 의견임을 밝힙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넓어진 시민사회 범주에 대한 동의와 논의할 거리들을 추후 정리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래야 그 흐름이 자치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Memo

토론5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김소영 |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1.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공동체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

개인은 가정, 학교, 직장, 종교 등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 속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은 필요에 의해 해결점을 찾아가며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 혼자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대에서 혼자가 편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듣기로 한 학급이 20~25명 정도인데 2학기가 끝나 가도록 학급 친구의 이름을 다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는 일부러 팀워크 과제를 내는데 각자 나눠 과제를 작성하고 sns를 통해 합쳐서 제출한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는 ‘2019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에 10대 청소년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자원조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력 관점에서 진행하게 되면서였다. 지역의 취약한 곳과 취약계층을 조사하며 10대 청소년들이 에너지빈곤층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연구원들이 찾은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가 사회관계망이었다. 독거노인이라도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지수가 낮아지고 개인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 조사와 분석을 통해 10대의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길지 염려가 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2. 마을에서 사회로, 사회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

개인이 느끼는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마을을 볼 수 있을까? 서울에서 마을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즘 성대골은 전환센터를 고민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문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마을운동의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위기감’을 어떻게

갖게 할까? 매일 내놓는 쓰레기들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감으로 다가 가도록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구환경의 파괴가 사회를 어떻게 흔들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협할지 거꾸로 고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된다면 개인, 마을, 시민단체, 정부의 역할들과 관계가 다시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흔히 지구촌이라 말하고 지구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건들을 여전히 해외토픽으로 국제 면에서 보곤 한다. 개인의 안전과 건강은 이미 지구공동체의 운명과 함께하고 있다.

3. 마을공동체와 NPO의 협력

가정에서 마을로 등장한 시민들이 순간적 필요에 의해서만 활동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알아간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로 활동을 하다보면 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참여하려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npo활동으로 확대될 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

기후위기에 직면해서 개인의 소소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멸종이라는 재앙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과학자들의 외침과 전 세계적 기후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위기감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연결되고, 각 단위에서의 역할을 주목하고 협력할 방안을 찾아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시민운동에 위기감, 불평등, 사회정의에 대한 고민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넘어 npo협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사)시민 × (사)마을 공동기획포럼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